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분석집

법 시행(2022.1.27.)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 공식 통계와 주요 판결로 보는 4년의 기록

고용노동부 공표자료 · 법원 판결 · 경제단체 분석 기반 | 2026년 8월 기준

SafePro | (주)노버스메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솔루션 세이프프로

일러두기

-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공표자료, 법원 판결, 한국경영자총협회·KDI 게재 분석, 주요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각 항목에 출처를 표기했습니다.
- 통계는 집계 기관·기준 시점·집계 범위(신고 기준/확정판결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다릅니다. 본문에 각 통계의 기준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 사례는 법인명 중심으로 기재했으며, 공개 보도·판결 공표에 근거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한눈에 보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	2022. 1. 27. (50 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2024. 1. 27.부터 5 인 이상 50 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처벌 대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등)
사망자 발생 시	1 년 이상 징역 또는 10 억 원 이하 벌금 (법인: 50 억 원 이하 벌금)
핵심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시행령 제 4 조: 목표 수립, 전담조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예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등 9 개 의무)

2. 숫자로 보는 판결 현황

2-1. 4 년간의 중대재해 (2022~2025)

- 산업현장 사망자 2,436 명 — 하루 평균 1.7 명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수분석, 매일노동뉴스 2026.4. 보도)
- 사고 발생 사업장 1,990 곳, 이 중 156 곳은 중대재해가 2 회 이상 반복 (동일 출처)

2-2. 판결 결과 분포 (신고 완료 기준, 2026.3.)

구분	건수/비율	비고
신고 완료	101 건	매일노동뉴스 2026.4.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실형	6 건 (5.9%)	한국제강, 삼강에스앤씨, 아리셀(1 심 기준·항소심 감형), 일광폴리머, 동일스위트, 금릉과동화
집행유예	80 건 (79.2%)	판결 대다수
무죄	10 건 (9.9%)	인과관계 부정이 최다 유형

※ 참고: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집계(2025.9. 기준)로는 1 심 이상 판결 71 건 중 유죄 65 건(91.5%), 무죄 6 건(8.5%), 실형 7 건·집행유예 55 건·벌금 3 건 (리걸타임즈 2026.5. 재인용). 집계 시점·기준 차이로 수치가 다릅니다.

2-3. 확정판결 공표 현황 (고용노동부, ~2025.12. 누적 44 건)

- 경영책임자 46 명 중 실형 2 명, 집행유예 42 명 (고용노동부 확정판결 공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026.4. 보도)
- 법인 벌금: 최고 20 억 원 ~ 최저 2 천만 원, 평균 약 1 억 1 천만 원 (동일 출처)

- 기소 사건의 83%가 중소기업 (매일노동뉴스 2026.4.)

2-4. 법원이 가장 많이 인정한 위반 조항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판결 분석(유죄 29 건 대상,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에 따르면:

위반 조항 (시행령 제 4 조)	인용 건수	비율
제 3 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24 건	82.8%
제 5 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	22 건	75.9%
1 건당 평균 위반 조항 수	3.07 개	-

업종별로는 건설업 51.6%, 제조업이 뒤를 이었고, 판결의 87.1%가 중소기업(50~299 인)에 집중되었습니다. (동일 출처)

3.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판결 10 선

사례 1. 제 1 호 판결 — 요양병원 증축공사 추락 사망 (온유파트너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 양측 항소 없이 확정

■ 사건 개요

- 2022. 5. 14.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 5 층(안전대 미설치)에서 철근 인양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망

■ 판결 결과

- 대표이사: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 법인: 벌금 3,000 만 원

■ 기업 시사점

-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판결.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구체적 관리조치와 연결해 판단한 첫 사례
- 추락 위험 방지 + 안전대 등 기본 안전조치 미비가 유죄의 핵심 근거

사례 2. 첫 실형·첫 대법원 확정 — 크레인 섬유벨트 절단 사망 (한국제강)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 고합 95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 도 12316 확정

■ 사건 개요

- 2022. 3. 경남 함안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 대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작업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져 1.2 톤 철판에 깔려 사망

■ 판결 결과

- 원청 대표: 징역 1 년 실형, 법정구속 (1·2·3 심 유지)
- 법인: 벌금 1 억 원

■ 기업 시사점

-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이자 첫 대법원 확정 판결
- 과거 유사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실형의 결정적 요인
- 하청 근로자 사망에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은 선례

사례 3. 징역 2 년 — 확인된 위험을 방치한 대가 (울산지법 판결)

울산지법 2024. 4. 4. 선고 2022 고단 4497 (제 15 호 판결)

■ 사건 개요

-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 사망사고 발생

■ 판결 결과

- 대표: 징역 2 년 실형 (당시 최고 형량)
- 사고 후 유족과 신속히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집행유예 불허

■ 기업 시사점

- '위험을 알고도 방치'가 가장 무거운 가중 요소임을 확인
- 사후 합의·조치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음 — 사전 예방 체계가 유일한 해법

사례 4. 역대 최고 벌금 20 억 — 1 년 새 3 명 사망 (삼강에스앤씨)

1 심 2024. 8. 21. → 2 심 2025. 6. 13. → 대법원 2025. 9. 26. 확정

■ 사건 개요

- 선박수리업체에서 2021. 3.~2022. 2. 사이 근로자 3 명이 잇따라 사망

■ 판결 결과

- 원청 대표: 징역 2 년 실형·법정구속

- 법인: 벌금 20 억 원 (역대 최고)
- 원청 조선소장 징역 1 년 6 월(집유 3 년), 하청 대표·법인 각 벌금 2,000 만 원 등

■ 기업 시사점

-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7 회 전력 + 법인의 사망사고 처벌 전력이 가중 요소
- 재판부: "안전보건 의무보다 벌금이 더 싸다는 계산이 서지 않도록 하는 형이 필요" (보도 인용)
- 유족 합의·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반복 재해 + 개선 노력 부재면 중형

사례 5. 1 심 최고형 징역 15 년 → 항소심 4 년 감형 —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아리셀)

1 심: 수원지법 형사 14 부 2025. 9. 23. 선고 2024 고합 833 → 항소심: 수원고법 형사 1 부 2026. 4. 22. 선고 | 대법원 상고심 계류

■ 사건 개요

- 2024. 6. 24.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전지 폭발로 화재 발생, 근로자 23 명 사망(이주노동자 18 명 포함)·8 명 부상 — 법 시행 이후 최대 인명피해
- 화재 이틀 전 전지 폭발 전조가 있었음에도 공정을 중단하지 않음

■ 판결 결과

- 1 심: 대표 징역 15 년(법정구속)·총괄본부장 징역 15 년, 법인 벌금 8 억 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 재판부: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
- 1 심 재판부는 일상 업무를 아들(본부장)에게 맡겼더라도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경영판단이 필요한 지시를 내린 대표를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로 인정
- 항소심(2026.4.): 대표 징역 4 년, 본부장 징역 7 년으로 대폭 감형 — 열감지기 설치·안전교육·위험성평가 등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전부 인정하되, 유족 전원과의 합의를 감경 사유로 반영. 대법원 판단 예정

■ 기업 시사점

- '대표직함이 아니라 실질 권한'으로 경영책임자를 판단한다는 점을 재확인 — 가족·임원에게 위임해도 면책되지 않음
- 항소심 감형에도 의무 위반 자체는 전부 유죄 —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재·폭발 대비, 전조 발생 시 공정 중단 체계가 핵심
- 양형이 크게 요동친 사건인 만큼 대법원 확정 결과를 계속 추적할 필요

사례 6.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 실질 지배·관리가 기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4. 11. 27. 선고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 도 14674 법리 원용)

■ 사건 개요

- 건설공사에서 피고인 측이 '시공을 총괄하지 않는 발주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툰 사건

■ 판결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유죄 —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있으면 도급인 책임 인정

■ 기업 시사점

- 계약서상 명칭(발주/도급)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가 처벌 기준
- 공사 발주 시 계약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안전조치 책임 범위를 사전 검토해야 함

사례 7. 무죄 ① — 체계가 '합리적으로 작동'했다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대구지법 영덕지원 2026. 1. 28. 선고 2024 고단 234 (전부 무죄)

■ 사건 개요

- 아스콘 포장 공사현장 협착 사망사고로 건설회사·대표·현장소장이 기소된 사건

■ 판결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전부 무죄

■ 기업 시사점

- 법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합리적으로 작동했다면, 이행이 일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 판시 (법무법인 뉴스레터·리걸타임즈 인용)
- '서류'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갖춘 기업은 방어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선례

사례 8. 무죄 ② — 감전 사고, 인과관계·예견가능성의 한계 (대전지법 논산지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2026. 1. 9. 선고 (전부 무죄)

■ 사건 개요

- 리조트 시설 내 호수 전기시설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로 시설회사·대표·시설소장이 기소된 사건

■ 판결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전부 무죄

■ 기업 시사점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을 엄격히 판단
- 무죄 판결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부정'이라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

사례 9. 무죄 ③ —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의정부지법 형사 3 단독 2026. 2. 10. 선고 (1 심, 검찰 항소 가능성 보도)

■ 사건 개요

- 2022. 1. 29.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천공작업 중이던 근로자 3 명 매몰 사망 — 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처법 1 호 사고'
- 검찰은 그룹 회장을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고 기소 (구형: 징역 4 년·벌금 5 억 원)

■ 판결 결과

- 그룹 회장·전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 법인: 중처법 무죄 (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위반으로 벌금 1 억 원)
- 현장 관계자 4 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 본사 안전책임 담당자 징역 2 년 집행유예 등
- 재판부: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며, 대표이사가 아닌 자(회장)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려면 실질적·구체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보도 인용)

■ 기업 시사점

- 그룹 회장 등 '총수'가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 제시 — 다만 아리셀 판결처럼 실질 권한이 입증되면 대표 직함이 없어도 처벌됨 (정반대 결론)
- 경영책임자 무죄여도 현장 관리자·법인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음
- 2025. 12.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6. 2. 의정부지법 등 경영책임자 의미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이어지는 중 — CSO 위임 구조만으로 면책을 장담할 수 없음

사례 10. 벌금형 선례 — 컴플라이언스 노력이 양형을 바꿨다 (제 23 호 판결)

경영책임자에게 최초로 벌금형만 선고된 판결 (안전신문 기고 기준)

■ 사건 개요

- 피해자의 이례적 행동이 개입된 사망사고

■ 판결 결과

- 경영책임자: 벌금형 (징역형 아님 — 당시까지 유일)

■ 기업 시사점

- 유족 처벌불원(합의)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강화 등 컴플라이언스 구축 노력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명시적으로 고려됨
- 평소의 안전투자 기록이 유사시 형량을 좌우한다는 실증 사례

4. 판결이 말해주는 양형 공식

실형으로 가는 3 가지 경로 (리결타임즈 2026.5. 분석)

- ① 안전점검으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신속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 ②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경우
- ③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누적된 경우

형을 낮춘 요소

-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
-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컴플라이언스 구축 노력 (제 23 호 판결, 영덕지원 무죄 판결)
- 사고 후 신속한 재발방지 조치 — 단, 울산지법 판결처럼 '사전 방치'가 있었다면 사후 조치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없음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시행령 제 4 조 기준)

아래 항목은 판결에서 가장 자주 위반으로 인정된 의무를 포함한 시행령 제 4 조의 핵심 의무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지금이 개선 시점입니다.

No	점검 항목	예	아니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있다		
2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위험성평가)를 마련해 반기 1 회 이상 점검한다 — 판결 인용 1 위(82.8%)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반기 1 회 이상 평가한다 — 판결 인용 2 위(75.9%)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한다		
5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이행을 반기 1 회 이상 점검한다		
6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작업중지·대피·보고체계)을 마련해 점검한다		
7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를 마련해 점검한다		
8	점검 결과와 개선 이력이 문서·데이터로 남아 언제든지 입증 가능하다		

6. 판결이 요구하는 '작동하는 체계', 세이프호가 만듭니다

무죄 판결(영덕지원 2026.1.)과 벌금형 판결(제 23 호)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 실제로 작동하고, 기록으로 입증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세이프호는 그 체계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합니다.

- 위험성평가·TBM·작업허가서·안전교육을 모바일 앱과 PC 웹에서 통합 운영
- 점검·개선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보관되어 반기 점검 의무 이행을 데이터로 입증
- 근골격계·직무스트레스 등 보건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
- GS 인증 1 등급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 공공기관 도입 가능

도입 문의: (주)노버스메이 | novusmay.com

참고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 공표 (2025.12. 누적 기준)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발생현황 전수 분석 (2026.4.22.)
- 리걸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 (2026.5.11.)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법무법인 율촌 뉴스레터,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2 건 분석 (2026.2.)
- 안전신문,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판결 동향 및 시사점 (정유철 특별기고, 2024)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법 확정판결 공표 분석 (2026.4.)
- 주간한국, 중처법 시행 4 년 분석 (2026.6.)
- 법률신문·서울신문·MBC 등, 아리셀 1 심 선고 보도 (2025.9.23.) / 한국경제·한경비즈니스, 아리셀 항소심 감형 보도 (2026.4.22.)
- 서울신문·헤럴드경제·중부일보 등, 삼표그룹 1 심 무죄 선고 보도 (2026.2.10.)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 도 12316 /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 도 14674 등 관련 판결

본 자료의 내용은 작성 시점(2026.8.)의 공개 정보 기준이며, 이후 판결로 통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